

학교교육의 끝

저: 우치다 타츠루

역: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오오츠시(大津市)에서의 이지메 자살, 오오사카 시립桜宮고등학교에서의 농구부의 주장 체벌 자살 등 일련의 사건은 일본의 학교교육 시스템 그 자체가 지금 제도 피로의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계가 고장 날 때는 금속부품도 플라스틱도 IC도 모두가 동시에 열화(劣化)한다. 그것과 비슷하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한꺼번에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

이것을 특정한 부품을 교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가 나쁜 거야?”라는 환부를 특정하는 물음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일본의 학교제도는 더 이상 국소적인 수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레벨에 있지 않다.

“일본의 학교제도의 어디가 나쁘니까?”라고 묻는다면 “전부 나쁘다”라고 대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학교교육은 ‘전부 나쁘다’고 해서 ‘전부 바꿀 수’ 없다. 자동차라면 신차가 들어올 때까지 버스로 다닌다든지 지하철과 같은 대체수단을 이용하면 되는데 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 새로운 학교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을 수용할 대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를 전부 바꾼다는 것은 ‘무학교상태’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런 솔루션을 채택할 수 없다.

즉 학교교육시스템을 전부 바꾸지 않으면 안 되지만 부품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돌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교육에 관한 나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수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본의 근대학교교육 시스템은 ‘국민형성’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었다. 즉 학교의 사회적 책무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 ‘국민국가를 담당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었다. 샐러리맨이 되더라도 병사가 되더라도 학자와 정치가라도 교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사(人士)’의 육성이다. 성패는 차치하더라도 이 목적 그 자체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었다.

1945년의 패전에서도 학교교육의 목적이 국민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사람을 키운다는 목적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없었다. 전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일본을 짊어질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다.

메이지유신 이래 학교교육은 ‘국민국가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교육의 수익자가 있다고 한다면(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단적으로 공동체 그 자신이었다.

그런데 이 합의가 무너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역사적 이유에 관해서는 군말이 필요 없다. 그것은 역사상 예외적인 평화와 번영이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코스트(비용)’을 여러 형태로 지불하게 되었는데 학교교육의 목적 변경도 그 중 하나이다.

이 때 학교교육의 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아서 권력, 재화 문화자본의 유리한 분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교육의 수익자가 ‘공동체’로부터 ‘개인’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물론 메이지 시대에 근대 학교제도가 정비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이익을 위해서 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본심’이었다. 하지만 “나 자신 혼자만의 입신출세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적나라한 본심을 입에 담은 것은 자제하였다. 어디까지나 학교교육의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공공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1970년대 이후 그것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결국 태연하게 학교교육을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기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기회’라고 공언하게 되었다. 교육의 수익자가 ‘공동체’로부터 ‘개인’으로 확실히 바뀐 것이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변화가 학교교육을 어떻게 변용시키게 될까? 어떻게 파괴하게 될까? 그때 일본인은 상상하지 않았다.

그 후 교육은 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증대시킬까?’라는 물음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육개혁도 교육비관도 그 점에서는 똑같았다. 그 전제 그 자체가 설정의 잘못이 아닐까 하는 반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문부과학성이 만든 문서에는 여전히 ‘애국심’과 ‘멸사봉공’같은 말이 여기저기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애국심’은 실제로는 단지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것’만 추구하고 있었다. ‘멸사봉공’까지 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글로벌 경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즉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때 국민국가는 거의 통째로 ‘영업이익모델’로 감축되었다. 상사가 말하는 것을 잠자코 듣고 혈뇨가 나올 때 까지 일하고 목표 매상치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학교교육의 사실상의 목표로 기치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다.

‘공교육’이라는 이념을 생각해 낸 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인이었는데 그것을 제도개혁으로서 실현해서 보인 것은 미국인 쪽이 빨랐다. 그런데 그 때도 공교육의 도입에는 강한 저항이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자기교육, 자기도야’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말을 들은 미국의 유복한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항의하였다.

“만약 교육을 받은 자가 거기서 얻은 지식과 기술 덕분에 출세해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

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내가 고생해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아이의 교육에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의 경쟁상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반대론은 강고한 것이었다.

공교육론자들은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교육지책을 폈다.

당신들이 세금을 내서 학교교육을 정비해 주면 글자를 읽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고 기초적인 사회적 훈련이 가능한 아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맨 여러분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들은 우수한 노동력이 되어서 활발한 소비 활동을 수행하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이 말을 받아들였다. 일단 미국의 고액 납세자들은 ‘노동자의 질 향상과 시장의 성숙’이라는 장기적인 이익을 ‘지금 당장 눈앞의 세액을 아끼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우선시할 정도의 계산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교육개혁론은 그 어느 것도 공교육에의 세금투입에 반대한 이 때의 미국의 납세자의 논리를 밀절미로 하고 있다. 즉 “교육의 수익자는 본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의 코스트는 자기부담이어야 한다”가 되는 것이다.

귀중한 공금을 지출한다고 하면 학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금 바로 그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일단 능력은 높지만 싼 임금과 장기간 노동을 받아들여 상사의 명령에 순종적으로 따르는 노동자를 양산해서 납세자의 돈벌이를 지원시키자 하는 논리이다.

여기에는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담당할 성숙한 공민을 육성한다’라는 장기적인 국익에 대한 배려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기업의 수익이 곧 바로 증대하는 교육적 outcome만이 추구될 뿐이다. 그리고 ‘단기의 손실과 이득을 우선해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억제하는 대항적 논리를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미디어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근대의 학교교육이 ‘국민국가내부적’인 제도인 이상 학교교육의 쇠퇴가 국민국가의 쇠퇴와 보조를 같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동반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국민국가는 그 해체과정에 있다. 영토가 있고, 관료조직과 상비군을 정비하고 그 토지와 문화에 강한 귀속을 가진 ‘국민’을 성원으로 하는 이 통치 시스템 그 자체가 끝을 보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사람, 자본, 상품, 정보가 초고속으로 국경을 넘어(cross border) 이동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불가역적으로 계속 항진(充進)한다. cross border 운동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는 국경, 로컬언어, 로컬법률, 로컬 상(商)습관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재빠르게 배제하는 것을 글로벌 자본주의는 요구한다.

경제의 글로벌화를 강력하게 인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인데 미국의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정치가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다.

국민국가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있어서 cross border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로컬장벽이긴 하지만 이용가치가 있는 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

국가자원은 정치가도 관료조직도 군대도 미디어도 물론 학교교육도 총동원된다. 그래서 글로벌화의 진행과정에서 ‘국민국가의 다음세대의 성원을 육성한다’라는 에둘러가는 목적을 드는 공교육기관이 존속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와도 학교교육과도 궁합이 나쁘다.

그래서 ‘글로벌화에 최적화된 학교교육’은 더 이상 학교교육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 교육에 관련된 모든 플레이어가 ‘자기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서 다른 플레이어를 이용하거나 그들을 제치거나 속이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고 그 장소는 ‘학교’라고 부를 수 없다.

실제로 학교의 글로벌리스트적 재편을 추구하고 있는 당해 글로벌리스트 자신 일본의 학교가 더 이상 학교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태연하게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스위스의 기숙학교에서 국제성을 익혀라’ 라든지 ‘하버드대학에서 학위를 따 와라’라고 명령한다. 일본의 학교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외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학교교육의 수익자는 본인이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깊게 신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간은 점점 해외에 옹비하면 된다. 일본은 어차피 침몰하는 배니까 가라앉는 데로 놔두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견식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학교교육에 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학교교육은 국민국가내부적인 ‘재생산장치’이고 본래 자기이익의 증대를 위해서 이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일본의 지배층의 과반은 이미 글로벌리스트이고 그들은 ‘다음세대의 일본을 짊어질 성숙한 시민을 키우는’ 목적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본인들 자신이 자식이나 제자를 외국의 학교에 보내고 국내에서의 고용창출에도 지역경제의 진흥에도 흥미가 없고 소득세도 법인세도 가능하면 내지 않고 싶어 하고, 그들이 그 수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기업의 주주도 사원도 이미 과반이 외국인이라면 그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 같은 것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회적 상승을 이루도록 지금 사회의 구조 그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절망적인 말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학교교육을 재생시키기 위한 대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을 시끄럽게 외치는 정치가와 미디어 지식인은 지금도 ‘공부하면 보상을 주고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당근과 채찍’ 전술로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파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제발 좀 자각을 했으면 싶다.

이익유도는 높은 학력과 사회적 지위와 높은 월급과 같은 ‘당근’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 ‘욕망을 갖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한다. “그런 것 필요 없어. 나

는 집에 들어앉아서 게임을 하는게 좋아”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이익유도는 전혀 무효하다.

그리고 똑같이 너무 스마트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 부가가치를 높이는 에둘러 가는 길을 감질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도 이익유도는 무효하다. 그들은 학교에 다닐 시간이 있으면 기업(起業)하거나 인터넷에서 주식을 매매해서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버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능으로 지금 곧 돈을 벌 수 있는 아이가 왜 굳이 학교에 다닐까.

당근과 채찍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유도하려는 전략은 이렇게 파탄을 맞는다. ‘욕망이 없는 아이들’과 ‘너무나도 스마트한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사라지는 것을 그것은 오히려 추진하게 된다.

은둔형 외톨이와 부등교(不登校)아이들은 ‘반사회적’이지 않다. 오히려 과잉적으로 사회적이다. 현재의 교육이테올로기를 너무나도 답답하게 내면화하였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무의미함을 견뎌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심한 말을 하자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왜 학교에 다닐까?”라는 물음을 던져본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다. “모두가 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정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만이 무심코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서구의 학교교육은 아직 일본의 학교만큼 격하게 열화(劣化)되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받는가에 관해서 일단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는 ‘공공적인 사명’이 맡겨져 있다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public school로부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진학하는 엘리트의 적어도 일부는 대영제국을 뛰어넘는다는 공적의무의 부하를 자신의 어깨에 느끼고 있다. 그런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도쿄대와 교토대의 졸업자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자각하고 있는 자는 거의 없다.

그들은 아이 때부터 자신의 학습노력의 성과는 모두 독점해야 한다고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공익보다도 사익을 우선하고 나라의 부를 사유재산으로 전이하는 것에 열심이고 사사를 위해서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이 출세하도록 제도설계되어 있는 사회에서 공공심이 높은 엘리트가 나올 리가 없다.

결론을 말하겠다.

일본의 학교교육제도는 말기적인 단계에 도달해서 잔재주를 부리는 ‘개혁’으로 어떻게 될 지경이 아니다. 그 만큼이 망가진 것이다. 유일한 구원은 같은 경향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이 국민국가내부적인 장치인 이상 글로벌화의 진행에 동반해서 머지않아 구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교육붕괴가 시작될 것이다(벌써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학교교육의 상대적인 열위(劣位)가 눈에 띄지 않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구원이 있다. 그것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이라는 사실이다. 국민국가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공교육은 해체한다. 그런데 ‘사숙(私塾)’은 그렇지 않다.

애당초 사숙은 공교육이전부터 즉 국민국가가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일본의 여러 성공한 사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테이지만 이러한 곳은 전부 뜻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창설한 교육기관이다.

이처럼 사숙은 각각 고유의 교육목적을 들고 있었다. ‘국가에 필요한 인재’라는 생경한 말이 아니라 좀 더 막연하게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수’있는 공공성이 놓은 인사(人士)를 키우려고 하였다.

그것이 소생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웃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자그마한 규모의 공동체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더라도 국민국가가 해체되더라도 쉽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작은 공동체’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고 그 공동체 성원의 재생산에 목적을 한정하는 교육기관에는 살아남을 찬스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많다.